

연이은 선거 참패_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2021년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34.4% : 62.7%), 2022년 3월 대통령선거(38.2% : 58.2%)와 6월 지방선거에서 연이어 참패했다.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는 광역단체장·기초단체장·광역의원 선거에서 지역구 당선인을 단 한 명도 배출하지 못했다. 부산시장을 비롯해 13명의 기초단체장, 41명의 광역의원을 배출했던 2018년 지방선거와는 극명한 대비를 이룬 결과였다.

선거 참패의 원인_

지역 현장과의 괴리

더불어민주당은 지나친 효율성의 정치를 추구해왔다. 현장에서 시민 시민단체와 함께하기 보다는 갈등이 정점에 이를 무렵 간담회등을 통한 의견 청취로 마무리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었다.

지난 2020년 부산 시민단체들은 부산항 8부두 미군 시설의 세균실험실 폐쇄 여부를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는 취지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를 결성하고 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부산시에 주민투표를 요구했다. 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민들과 함께 박형준 시장을 압박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시민의 의견수렴과 선조사·후조치 수준의 의견표명을 하는데 그쳤다.

더불어민주당은 2023년 4월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2호기에 대한 정부의 수명연장 추진 문제에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부산의 시민단체들은 지난 9월 '더30km포럼'을 창립하기도 하는 등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이라는 당론이 부정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안에 대한 메시지를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 열매만 쟁취하는 가성비외의 정치를 넘어, 사람과 지역을 키우는 현장의 정치가 필요한 때다.

민생의제의 소외

중앙당도 민생의제를 외면하면 안 되지만 사·도당은 민생의제 중심으로 무게추를 옮겨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2019년 하반기부터 대선 직전까지 검찰개혁과 소위 '검수완박'에 당력을 총동원해 개혁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개혁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는 '생활'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가 많았다. 부산시당은 지난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에서 '가덕신공항', '부울경매가시티', '2030 부산월드엑스포', '경부선지하화'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시민들의 삶에 정말 도움이 된다는 메시지를 충분히 전달하지 못했다.

일각에서는 또 다른 '토건 사업'이나 '전시행정'으로 치부하기도 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공약으로 나왔던 민생의제 중 대표적인 것이 '기본소득', '기초연금', '지역화폐' 등이 있었다. '내 삶에 도움이 되는 더불어민주당'의 가치를 분명히 할 수 있도록 정책과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청년 및 정치신인에게 좁은 입구

더불어민주당의 핵심 세력은 87년 민주화운동의 당사자들이다. 이들 소위 586세대는 지난 30여 년 동안 정치적 책무를 수행해왔다. 질서 있는 전진을 통해 수많은 사회변화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지금의 2030 세대는 이들과 정서적인 거리감이 있다. 한 연구에 따르면 4050 연령집단 이상 세대에게 사회적 질서가 중요한 가치였다면, 2030 연령집단은 개인적 자유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지난 대선에서 2030의 전략적 투표 성향이 확인된 만큼 이들을 향한 적극적인 신호를 보내야 한다.

지난 대선 당시 부산시당 선대위에 5명의 청년 상임선대위원장을 포진시키고 2030 선대위를 별도로 출범시킨 것은 새로운 시도로 평가받기 충분했다. 그러나 단기적인 성격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었다. 2030 정치신인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그 활동을 인정받고 공천을 받는 젊은 정치 시스템을 상시 구현해야 한다.

당원 참여의 부족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의 당헌에는 제1장 '총칙' 다음인 제2장에 '당원'이 나온다. 그리고 당규에는 권리당원 다수의 추천 외에도 권리당원 20% 이상이 참석하는 당원총회에서 대의원을 선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은 편의적 선택으로 당규를 사문화시켜 왔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권리당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입장을 내거나 행사를 할 수 있는 단위조직이 사실상 없다. 부산시당의 각 지역위원회 운영 또한 국민의힘 당원협의회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움직여야만 부산시민들과의 접점을 넓힐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의 비전과 슬로건, 정책을 다양한 교육·연수 사업을 통해 체화해야 한다. 아울러 다양한 행사에서 시민을 만나는 도구로 이를 활용해 시민들이 더불어민주당의 존재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혁신의 방향

- △ 비전의 공유, 민생정책의 전면화
- △ 열린 공천 실현
- △ 당원 중심 민주주의 실현
- △ 시민 소통과 참여 강화

위원회 구성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혁신위원회

위원장 | 유동철

위원 | 외부 4명, 당내 36명 (지역위별 권리당원 1명, 기초의원 1명)

구성비 | 여성 13명 (32%), 만 45세 이하 청년 9명 (22%)

정책비전 분과

분과위원장 | 최종태

분과위원 | 황수진(간사), 권성하, 김종심, 유동철, 유영현, 윤지환, 이철우, 진희권, 최은영

당내민주주의강화 분과

분과위원장 | 허운영

분과위원 | 이경영(간사), 김용진, 송순정, 신기삼, 이경숙, 이민아, 임성배, 주성환, 한일태

지역위원회활성화 분과

분과위원장 | 신병철

분과위원 | 황수진(간사), 권성하, 김종심, 유동철, 유영현, 윤지환, 이철우, 진희권, 최은영

참여소통 분과

분과위원장 | 변강훈

분과위원 | 이수정(간사), 김대준, 박근환, 박찬형, 서재민, 양달막, 양의호, 이상철, 허미향

더불어민주당

활동 연혁

더불어민주당 부산광역시당 혁신위원회

2022.08.23. 제1차 상무위원회, 혁신위원회

구성 및 설치 의결

2022.08.25. 혁신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2022.08.29. 제1차 혁신위원회 전체 회의

2022.09.05. 제2차 혁신위원회 전체 회의

2022.09.06. 부산지역 정치외교학과 교수 개별 인터뷰

2022.09.06.~19. 온라인 의견수렴

2022.09.13. 제3차 혁신위원회 전체 회의

2022.09.19. 부산지역 교수 모임 간담회

2022.09.23. 제4차 혁신위원회 전체 회의 (혁신위 워크숍)

2022.09.24. 부산시당위원장 당원 간담회

2022.10.13. 부산시당 혁신안 초안 보고

2022.10.25. 부산시당 혁신안 최종보고서 채택

2022.11.29. 부산시당 혁신안 발표

더불어민주당

#1

당원 중심, 부산시당!
당원의 힘으로 비전 수립

현황 및 문제점

- 온라인 당원 가입 확대 등으로 권리당원 숫자는 증가했지만, 부산시당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부족하며 당원이라는 일체감이 높지 않음
- 부산시당 비전 및 공통의 목표 의식 부재, 목표 의식 부재는 부산시당을 중심으로 한 당원 응집력과 지도력 저하 초래

혁신 방향 및 내용

- 일반 당원들이 직접(지역위원회 등 회의체계를 거치지 않더라도)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활동 공간 및 통로 마련
- 부산지역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광범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부산시당의 비전 수립
- 부산시당의 비전 및 장단기 목표에 부합하는 활동 및 평가 필요, 전 당원이 같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고 목표를 달성해 내는 경험 축적

실행방안

- 당원총회 적극 추진
 - 당원자치회 등 정기적인 부산시당 당원 모임 통해 당원들의 활동 공간 보장 및 일상적 소통강화
 - 당규에 명시된 당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회의를 통해 당원 직접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경험과 성과 축적
- 당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부산시당 비전 수립
 - 부산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당원들의 의지에 근거해 부산시당의 비전 및 목표 수립
 - 부산시당의 비전 및 장단기 목표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계획을 마련, 목표와 계획에 근거한 사업 및 평가 시스템 구축

#2

정책 중심, 부산시당! 오륙도연구소 정책생산 기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당 내 오륙도연구소가 있으나 아무 역할을 못 하는 현실
- 부산시당 내 정책 인력은 1인에 불과, 정책 생산 등의 활동은 불가능하며 선거 정책 등은 외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

혁신 방향 및 내용

- 오륙도연구소 상근인력 배치 및 정상화
- 오륙도연구소는 정책에 대한 의견 취합, 외부 전문가 관리 등 정책 생산에 집중
- 부산시당 사무처, 오륙도연구소, 광역·기초의원 간 정책 업무 분장을 구체화해 유기적 협업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생산 및 관리 방안 마련

실행방안

- 오륙도연구소 정상화 및 박사급 상근인력 채용
 - 중앙당 민주연구원 파견 등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 오륙도연구소는 정책 생산 활동에 집중하고 의정 지원 기능은 별도 방안 마련
- 시민사회 및 학계와 상시적 정책연대 실현
 - 정책 분야별 상설위원회 구성 및 주요 현안별 특별위원회 구성
 - 시민사회와 정기 정책 협의회 및 의제별 세미나·토론회 등 일상화
- 정책 아카이브, 정책 수렴 플랫폼 구축
 - 전현직 광역의원, 기초의원의 정책 성과 및 한계를 아카이빙
 - 온라인 정책플랫폼 상설화(부산시당 온라인플랫폼과 연계)

#3

교육 중심, 부산시당! 교육연수위원회 기능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당 내 교육연수위원회가 있으나 예산 등의 한계로 활동 저조
- 온라인 당원 증가, 급격한 사회변동 및 정치환경 변화 등으로 상시적 당원 교육 시급
- 선출직공직자 및 출마자의 자질·능력에 대한 문제 제기는 만성화된 지경이나 부산시당의 구체적 대안은 부족

혁신 방향 및 내용

- 교육연수위원회 기능 강화
- 정기적 당원교육과 선출직 출마 예정자 교육·연수 강화
- 학계, 시민사회 등과 연대해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체계화

실행방안

- 교육연수위원회 기능 강화
 -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을 지역위원장이 겸임, 지역위원회와 소통 및 연계 강화
 - 교육연수위원회 예산 대폭 증액 및 고유 사업 마련
- 정기적 당원교육과 출마 예정자 교육·연수 강화
 - 월례 또는 분기별 당원 교육 진행(민주적 의사소통과 조직 운영, 당헌·당규, 사회변화 대응에 대한 교육 필요)
 - 공직 후보자 필수 교육 프로그램 마련 및 과락제 적용 등 강도 높은 관리 필요 (정치 및 선거 기술적 교육 외 문해력, 문서작성 능력 등 일반교양 교육 필요)
- 학계·시민사회 등과 연대, 교육 프로그램 및 커리큘럼 체계화
 - 부산시당 고유의 교육 프로그램 및 내용 구축(부산시당비전, 부산시당사, 지역 현안 등)
 - 지역 학계·시민사회와 연대해 위탁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발굴

#4

투명한 공천,
열린 공천, 시민참여 공천 실현

현황 및 문제점

- 공천 심사를 목전에 두고 공천 심사 기준이 정해지거나 변경되어 혼란 초래
- 공천 심사 기준이 지역위원회와 출마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현장 혼란 발생
- 공천 심사 기준 등의 잦은 변동 등으로 자의적 해석 및 적용 등의 문제 발생

혁신 방향 및 내용

-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위해 당원의 의견을 반영한 시스템 공천 방안 마련
- 공천 과정에서 시민 의견 반영 제도화
- 후보자 사전 모니터링 강화
- 후보 발굴을 위한 일상 활동 강화

실행방안

- 공천 지표 개발 및 사전 공개, 공천 감시조직 운영
 - 당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체적인 공천 지표 개발 및 사전 공개
 - 일방적 공천, 자의적 지침해석 등을 막을 수 있도록 실질적 권한을 가진 공천 감시조직 운영(시민사회 등과 연계)
- 시민 공천배심원단 구성
 - 배심원단을 구성하고 공관위 심사 때 의견 반영
- 열린 공천 강화
 - 청년과 여성은 슈스케(공개경쟁) 방식의 정책 배틀 등의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해 예비후보 풀 마련
 - 시민사회 및 각계 전문가 적극 영입
- AI 후보자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 중앙당과 협력해 온라인상의 후보자 정보 자동 DB 구축 시스템 등을 마련하고 공천 지표에 반영

#5

권리당원 자발적 활동 적극 지원 및 지역위 상설위원회 활동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권리당원 및 일반당원이 활동 의지가 있어도 참여 가능한 지역위원회 활동의 범위가 매우 협소
- 지역위원장이 상무위원을 지명하는 방식으로 선출, 상무위원의 활동이 저조하며 권리당원의 참여 제한
- 각종 상설위원회의 구성이 형식적이며, 실제 활동하는 조직이 거의 없음

혁신 방향 및 내용

- 권리당원이 지역위원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및 일상적 활동 공간 마련
- 필수 상설위원회 설치 및 운영 활성화 지원
- 일반당원 및 지역주민 참여 가능 프로그램 개발

실행방안

- 상무위원 활동 활성화
 - 상무위원을 중심으로 당원과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각종 친목, 동호회 형식의 소모임 구성·운영 적극 지원
 - 상무위원 공개 모집
- 권리당원 지역위원회 참여 제도적 보장
 - 가능한 지역부터 당규상의 권리당원총회 성사 지원
 - 권리당원과 소통 강화를 위한 지역위원장 중심의 당원 만남의 날, 간담회 등 일상화
- 상설위원회 활성화
 - 상설위원회 구성·운영 실적을 지역위원장 평가에 반영
 - 실질적 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 마련
- 일반당원 및 지역주민 참여 가능한 강연, 토론회, 집담회, 문화행사 등 적극 지원

#6

정치신인 (청년·여성) 적극 지원·발굴 시스템 마련

현황 및 문제점

- 대다수 정치 신인들이 선거가 임박해 출마를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공천 및 선거 과정에서 지역 당원들과 협력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음
- 신인 정치인들이 자신만의 커리어와 실력, 당 활동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통로가 없어 기성 정치인의 발탁에 의지할 수밖에 없음

혁신 방향 및 내용

- 신인 정치인들의 입문과 발굴, 육성을 지원할 수 있는 공식적 시스템 마련
- 청년당원 비율 확대
- 정기적 이벤트를 통해 정치신인(청년·여성) 발굴

실행방안

- 신인 정치인 지원 시스템 마련
 - 정치 입문, 커리어 구축, 공천까지 단계별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청년당원 비율 30% 확대
 - 청년당원 비율 30% 확대를 위한 TF 구성, 실행방안 마련
 - 청년당원들의 의견 개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활동 지원
- 지역위원회와 연계, 청년연설회, 청년토론대회, 청년정책 배틀 등 정기적 개최



더불어민주당

#7

시민의 목소리 적극 대응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

- 부산시당이 중앙당 기조로 운영되는 문제
 - 시당의 자율성과 책임성 보장
 - 지방선거 시에도 하향식 소통 체계
 - 지역과 괴리되거나 소외
- 지역주민의 민원 및 의견 전달 등 소통이 어려움
 - 시당과 전화 연결이 어렵다는 항의 많음

혁신 방향 및 내용

- 지역 사정을 잘 아는 사무처와 조직 구성
 - 지역 활동성과 연대성 강화
 - 지역 의제 발굴과 참여
- 정치소비자(유권자) 적극 대응 체계 마련

실행방안

- 인사와 조직 개편
 - 사무처장 지역 공모제 또는 지역경력제 도입
- 대표전화 콜센터 운영(연결 및 사후관리)
 - 외주 또는 자원봉사자 운영



#8

시민사회 상시 연대 체계 구축

현황 및 문제점_

- 민주당 중앙당의 인지도는 높으며, 부산시민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이는 반면, 부산시당에는 비호감이거나 존재감이 미미한 상황

혁신 방향 및 내용_

- 부산지역 내 인지도와 존재감, 신뢰 향상

실행방안_

- 부산형 정책 소통, 공감 TF 구성
 - 지역 의제를 주도하고 정책 효능감 높임
 - 세대별 지역 의제 개발과 정책 공감 향상(일자리, 주택, 건강 등)
 - 시민사회와 지역 이슈에 대한 상시적 대응과 연대 체계 조성
(난개발 도시 정책, 재정감시, 각종 조례 재·개정 등)



현황 및 문제점

- 유명무실한 당원 게시판, 소통 창구와 소통역량 부족
- 참여와 소통의 내용이 데이터로 구조화되지 않음

혁신 방향 및 내용

- 당원 및 시민의 목소리가 051창구/51초 발언대로 모이게 하고 시민과 당원들의 의견들이 데이터로 구조화되고 상향식 의제들이 생산되는 소통 플랫폼 구축

실행방안

- 소통역량 강화 TF팀
 - 시당과 시민과 당원들과 쌍방향의 소통역량 강화
 - 소통이 데이터화되는 구조
 - 매달 시민과 당원 목소리들의 주요한 키워드들을 분석하고 데이터화 함
 - 단어 키워드 분석을 통해 시민과 당원들의 의견이 상향식으로 정책이나 지역 의제로 채택함.
 - 사례 지방선거 "동백 동네를 바꾸는 100자의 힘" 캠페인
- 지역별 18개 소통 창구(온라인)와 다양한 소모임 활동들 지원



#10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현황 및 문제점

- 지역이 주도하는 시민참여 민주교육과 워크숍을 통한 참여와 소통의 강화

혁신 방향 및 내용

- 18개 지역의 교육 프로그램을 각 지역에서 직접 기획 및 섭외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시민참여 민주교육의 장을 마련함. 지역 현안과 의제 공유하고 창의적 소통의 장을 마련함

실행방안

- 지역 주도형의 시민참여 프로그램 활성화
 - 지역별 (18개)로 직접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역주민 당원과 소통하고 필요시 시당이 인적, 물적 지원을 하는 방식.
 - 철저한 지역 주도형 프로그램으로 시민과의 스킨십 확대.
 - 지역별로 현실에 맞게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